



주간 통일정세

2012-3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애국주의는 부강조국 건설지침(9/10, 조선신보)

- '9·9 국경절의 애국주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월26일 노동당 책임일꾼과 한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언급하고 '김정일 애국주의의 지향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라고 조선신보가 10일 전함.
- 또한 "경제사업을 맡아보는 국가행정기관 일꾼들은 실천 경험과 결부해 노작의 진수를 체득하고 있다"며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이며 따라서 인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애국주의는 다름 아닌 사회주의애국주의로 된다는 논리"라고 밝힘.
- "최고영도자의 관점은 장군님(김정일)께서 산 모범을 보여주신 사회주의애국주의가 전체 인민의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전환되어나갈 때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경축하는 열병식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사회주의애국주의의 발현'이라고 설명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건국절' 조촐히 치러(9/10,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권 수립일'을 조촐히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간부들에게 "9·9절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수반을 모신 날"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제1위원장이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군 협주단의 종합공연을 관람함.

● 北총리, 함남 검덕지구 찾아 수해복구 독려(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최 총리는 검덕지구의 피해지역 곳곳을 찾아 복구 상황과 주민의 생활 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독려하는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성(省), 중앙기관 등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문제가 토의됐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수해 때 헬기로 中근로자 구조 지시(9/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북한 내 광산에서 일하다 수해로 생사 위기에 처한 중국인 근로자들을 헬기를 보내 구출했다고 소개함.
 - 통신은 이날 '국제주의적 의리와 인간 사랑의 숭고한 정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월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함경남도 장진군의 한 광산에서 중국인 근로자 6명이 구출되는 상황을 상세히 전함.

■ 김정은동향

- 9/13,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성을 지닌 김명복(평남 정보기술교류소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9.13,중방)

나. 사회·문화

- **北,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 생중계(9/11,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달 중순부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경기를 매주 한 차례씩 생중계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RFA와 VOA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7일 보도 등을 인용해 중앙TV가 지난달 분데스리가와 경기 중계 계약을 맺었고, 녹화 방송되는 한 경기를 포함해 매주 두 경기를 중계할 것이라고 전함.
- **北 아리랑 공연, 9월 말까지 연장(9/12, 연합뉴스)**
 -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일정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베이징에 있는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해 아리랑 공연이 9월27일까지 연장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였으며, 애초 9월9일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20일가량 연장된 셈임.
- **北매체, 中 현지발음 대신 한자 독음 표기(9/13, 연합뉴스)**
 -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지명과 인명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북한 매체들이 이달 들어 다시 우리식 한자 독음을 쓰기 시작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북한 주요매체들의 최근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매체들이 이달 초부터 일제히 중국 국가주석 이름을 '후진타오(胡錦濤)' 대신 '호금도'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김정은 시대' 北엔 놀이공원 개발 붐(9/13,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평양뿐 아니라 각 지방에도 놀이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올해 7월 준공된 룡라인민유원지가 수많은 이용자로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평양에서 2010년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이 개업했고, 현재 대성산유원지, 만경대유희장, 문수물놀이장을 전면 개건·현대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北 "수해로 300명 사망·이재민 29만명"(9/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여름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9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밝힘.
- 이 통신은 '종합된 자료'를 근거로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수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300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부상 또는 실종됐으며 살림집(주택) 8만7천280여 가구의 파괴·침수, 이재민 29만8천50여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 北 5세 미만 사망률, 세계 69위(9/14, 연합뉴스)

- 2011년 현재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가 1천 명당 33명이 사망해 세계에서 69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함.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990년 1천 명당 45명에서 2000년에 58명으로 늘었다가 2011년에 다시 33명으로 줄었으며, 2011년 5세 미만 남자 어린이의 사망률은 1천 명당 35명, 여자 어린이의 사망률은 32명이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룡남산TV 방송'(9.5일부터 개시), 대학생들에게 인기 자랑(9.12, 중통)
- '국가산업미술전시회(4.10일 개막) 폐막식, 9.12 리무영(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국가산업미술중심에서 진행(9.12,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中에 청진항 개방...3·4호 부두 30년간 임대(9/10, 연변일보)

- 북한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중국에 개방해 중국의 동해 뱃길 가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라고 연변일보가 10일 전함.
-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시 소재 민영기업인 연변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은 지난 1일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했으며, 북·중은 이번 계약에서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700만t인 청진항 3·4호 부두를 30년 간



공동 관리 · 이용하기로 합의함.

- **北, 적십자 국제회의서 수해 상황 집중 설명(9/1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적십자 회의에서 올해 수해 상황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 만나 "북한은 (최근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 회의에서 다른 사업은 얘기하지 않고, 이번 피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며 "176명 사망, 22만명 이재민 발생, 가옥 파괴 등을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전함.

- **中자선기금, 北서 백내장 수술 지원(9/10, 조선중앙통신)**
 - 중국 홍콩의 자선기금이 북한에서 백내장 환자의 수술을 지원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통신은 "중국홍콩여광년자선기금회는 중국 내에서 진행하여온 광년광명행동을 조선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기금회는 지금까지 광년광명행동을 통해 중국 각지의 수 십만 명의 백내장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해 광명을 안겨주었으며 재해 및 빈민구제활동과 교육, 과학기술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강하국 보건성 부상은 개막식에서 "광년광명행동을 통해 많은 환자가 병을 고치게 될 것"이라며 "기금회의 백내장 무상치료활동은 조중 두 나라 보건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캐나다 · 아일랜드, 北에 긴급 식량지원(9/11, 미국의소리(VOA))**
 - 캐나다와 아일랜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총 325만 달러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300만 달러, 아일랜드는 20만 유로(25만5천 달러)를 각각 WFP의 대북 식량 구호 사업에 지원했고 WFP는 아일랜드의 지원금으로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3만3천 명에게 1개월 동안 영양 지원을 할 계획임.

- **WHO, 北 수해지역에 전염병 센터 설치(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올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설사, 급성 피부 질환, 급성 호흡기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WHO는 이런 현상을 우려해 총 31만 달러를 북한 수해복구 사업에 배당하고 가장 심각한 수해를 입은 황해도에 '전염병 센터'를 설치했다고 전함.
 - 전염병 센터는 긴급 의료 세트와 수인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실험



도구를 갖추고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는 한편 환자를 신속히 치료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中연변에 '평양 친선도서관' 개관(9/11, 연합뉴스; 연변일보)**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북한의 각종 도서 5천여권을 갖춘 '중국 연변·북한 평양 친선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또한, 도서관은 연길시 연변도서관 내에 마련됐으며 최근 연변주 정부와 북한출판물교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갖고 공동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힘.

● **北 금강산사업 주도 회사, 北中 경협에 눈돌려(9/12, 연합뉴스)**

- 금강산 관광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백호무역총회사가 최근 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 등에서 중국기업과 대규모 합작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연합뉴스가 12일 밝힘.
- 대북 소식통은 12일 "백호무역이 최근 나선특구를 비롯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 행정특구 등에서 중국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세워 각종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나선백호무역회사'와 중국기업이 합작해 대형 국제무역센터 등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나선백호무역회사'가 바로 백호무역총회사라고 설명함.

● **中 샤먼서 황금평·나진 투자설명회 개최(9/12, 하이시천바오)**

-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도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나진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렸다고 하이시천바오(海西農報)가 12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샤먼에서 열린 제16차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 기간인 지난 9일 오후 북한 투자설명회가 별도로 개최됐다고 보도함.

● **유엔 "北, 수해지원 추가 요청 없어"(9/1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이달 12일 현재 유엔에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RCO)을 인용해 14일 전함.

● **中서 5년 체류 30대 탈북여성 강제 송환(9/14, 인민망(人民網))**

- 중국에서 5년여 간 체류한 30대 탈북여성이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이 14일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후베이성 어저우(鄂州)시 공안과 출입국관리 당국은 불법 입국·체류 혐의로 검거된 북한인 A(30·여) 씨를 지난 7일 지린성 연변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힘.

● **北, 中 곳곳서 투자 유치 '쟁결음'(9/14, 연합뉴스)**



- 북한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천더밍(陳德鎰) 상무부장과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지난 7일에는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8회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에서 '북·중 무역투자프로젝트 상담회'를 열고 나선·황금평 경제특구의 개발 현황과 투자 우대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음.

● 국제적십자, 北에 29만달러 추가 지원(9/15,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가 태풍 블라벤으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 1만1천 6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9만 달러를 긴급 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5일 전함.

● 北 황금평경제특구 관리청사 착공식(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청사 착공식이 15일 현지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착공식에는 북한 측에서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과 평안북도 및 신의주시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선 라오닝(遼寧)성 부성장 등이 참석
- 참석자들은 연설에서 "(북·중) 쌍방이 황금평 경제구를 공동개발, 공동 관리하는 것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두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핵시설 안전관리법' 제정(9/13,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해온 핵시설 관리에 관한 법안을 지난해 제정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13일 확인함.
- 이 소식통이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방사성 물질 및 핵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환경방사능 감시 등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전함.
- 특히 이 법안은 북한이 핵시설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 안정성 분석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핵사고나 핵폭발로 방사성 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각 등의 기관이 특별감시조직을 꾸리고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을 검사하는 등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도 명시했다고 보도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장, 9.7 모스크바 핵군축 및 전파방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 조약의 생활력 보장' 주제로 연설(9.12,중통)
-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장, 9.7 '2012년 9월 모스크바 핵군축 및 전파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연설에서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실행 보다는 평등하고 비례적인 핵무기축감 및 철폐조치 강구" 주장(9.13,중통)

3. 대남정세

- 北, 수해지원 수용.."품목·수량 알려달라"(종합)(9/10,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10일 통보해 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수해 지원을 받겠다면서 지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함.
 - 북측은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우리 대한적십자가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힘.
- 수해지원 불발..北 "그런지원 필요없다"(종합2보)(9/12,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어제 오후 북측에 밀가루 등의 지원 품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북측이 오늘 오후 '그런 지원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함.
 - 정부는 전날 대북 통지문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긴급 수해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밀가루 1만과 라면 300만개, 의약품·기타 물품 등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보내고자 한다"고 지원 품목과 수량을 북측에 제시했으나, 북측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지원 품목과 수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힘.
- 北, 개성공단기업에 '징벌적' 벌금규정 통보(9/1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회계조작에 대해 징벌적 벌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통일부는 북측이 8월 초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에는 입주 기업이 회계조작을 했을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함.
- 北어선 NLL 침범 때 북한군 해안포 개방(9/15, 연합뉴스)
 - 북한 어선이 지난 12일 연평도 서북방 NLL(북방한계선)을 두 차례 침범



했을 때 북한군이 인근 해안포의 포구(砲口)를 개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소식통은 15일 "북한 어선의 NLL 월선 때 북한군 경비정이 기동하고 해안포도 개방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軍 '국방개혁기본계획 12-30' 확정 관련 '구조개편의 간판 밑에 軍 구조를 공격형으로 뜯어고치고 무력증강을 본격적으로 다그침으로써 북침전쟁도발태세를 전면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각본'이라고 비난(9.11, 중통·노동신문·평방/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
 - 'UFG훈련' 관련 '나라의 통일과 조선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최악의 핵전쟁연습으로 도전해 나섰다고 왜곡하며 재차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9.11, 중통)
- 【北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기자회견(9.12)】 남측의 대북수해지원 관련 '보잘 것 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들고 우리(北)를 또다시 심히 모독했으며 처음부터 진심으로 지원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비난(9.12, 중통·중방)
 - 쌀이나 시멘트, 복구용 장비는 다들 곳에 전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지원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뽐내며 우리는 애당초 큰물피해와 관련해 괴뢰당국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한 것이 없지만 이번에 더욱 환멸을 느꼈음.
-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진정성있는 태도변화, 핵개발과 무력도발 등) 관련 南北경제협력이 중단된 것은 '역적패당의 대결정책과 그 산물인 '5.24조치' 때문'이라며 '철회' 촉구(9.12, 중통·노동신문/북남관계 파괴자들의 뻔뻔스러운 말장난)
- 우리군의 연평도·대청도 수역 사격훈련(9.10~14) 관련 '北의 최후결전은 도발자들에게 철추를 안기고 민족의 세기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再次 위협(9.12, 중통·노동신문/최후의 결산만이 남아있다)
- 北 인권의 달 선포식(9.3/국회헌정기념관) 관련 '남북관계 파국을 심화시키고 전쟁위험까지 몰아오는 극악한 민족반역행위'라고 비난(9.12, 중통·노동신문/모락소동의 대가는 비참한 파멸)
- 우리 국방부의 '국방정책기본계획'을 "북침전쟁계획"이라고 왜곡 비난 및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즉시적 대응타격' 위협 강조(9.13, 중통·민주조선)
 - 국군 해병대의 연평도 부근 사격훈련 비난 보도(9.13, 중통·중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핵시설 안전 관리법' 제정(9/13,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해온 핵시설 관리에 관한 법안을 지난해 제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됨.
-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방사성 물질 및 핵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환경방사능 감시 등에 관한 법안을 채택함. 특히 이 법안은 북한이 핵시설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 안정성 분석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법안은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에서 "해당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을 건설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성 안전을 담보하는 핵 안전성 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핵안전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또 방사성 피해를 막기 위해 핵시설 주변에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을 설정하고 핵안전감독기관이 핵시설 주변의 공기, 물, 토양, 생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상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대책을 세우도록 함. 법안은 핵사고나 핵폭발로 방사성 오염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각 등의 기관이 특별감시조직을 꾸리고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을 검사하는 등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도 명시함. 이와 함께 법안에는 북한이 방사성 오염방지를 위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교류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됨. 이 법안은 6개장과 50개 조로 구성됐고, 제정 배경에 대해 "방사성 오염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설명함.
- 앞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27일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등을 위해 2011년 제정 또는 개정된 법안이 40건이나 된다고 방사성오염방지법 제정 소식을 전한 바 있음. 북한의 방사성오염방지법 제정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북한의 핵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임.
- 북한은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 방사실험실, 핵연료기공공장 등의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영변에 새롭게 건설 중인 경수로도 건물 외형이 상당 부분 완성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서 노후와 안전대책 미흡 등에 따른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



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음. 미국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경수로 원자로 건설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원자로다. 사고 위험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음. 특히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사고 이후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짐.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경수로 건설 등 북한 내 핵안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을 감안해 법안을 제정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핵이용'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美 "北 공격 대비 미사일방어기지 추가 건설하자"(9/12, 연합뉴스)

-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340억 달러(약 38조2천840억 원)를 들여 구축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국립연구회의가 11일 주장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립연구회의는 이날 의회의 요청으로 작성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신속한 소형 무기를 증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해온 제3의 미사일방어 기지를 북동지역 주에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함. 보고서는 신형 요격 미사일을 갖춘 제3의 미사일방어기지 건설은 앞으로 몇 십 년간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서 미국 본토와 캐나다를 보호할 수 있는 방위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적대국이나 불량국가로 설정한 북한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이 도달하기 전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이를 파괴하기 위해 구축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보잉사가 관리하고 있음. 미국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있는 MD 작전센터에서 미사일 관련 정보를 탐지하고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도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2008년12월 이후 한 번도 시험요격을 해보지 않음.
-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 국립과학원 산하의 국립연구회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 개선에는 시간과 돈, 세심한 시험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장 원시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작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함. 보고서는 미사일 발사 직후인 이른바 '상승 국면'을 포함해 미사일방어를 수많은 단계별로 시험을 해봤다면서 "만약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계획대로 작동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초기에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국립연구회의는 미국 육군과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MDA)도 국외 주둔 또는 전투지역의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등의 지상 및 해상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올바른 길



을 견고 있다고 칭찬함.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 초기 세대의 아주 제한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같이 제한된 목표 하에 개발돼 북한의 개량형 미사일에 대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다고 우려함. 국립연구회의는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의 이전 개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다면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 체제를 적절한 시간 안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개선할 수 있어 북한이나 이란의 개량형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보고서는 이를 위해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언이 제작한 현행 요격 탄두를 좀 더 무겁고 성능이 좋은 탄두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레이시언이 제작한 최첨단 탄두의 가격은 개당 3천900만 달러(약 439억 원)라고 덧붙임. 이에 대해 리처드 레너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행 시스템은 북한이나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에 맞서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라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속도 붙는 北中경협 남북통합 걸림돌 되나>(9/11, 연합뉴스)

- 북한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다녀온 이후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북 투자계획을 내놓고 북한은 항구개방 확대, 세금감면 정책 검토 등으로 호응하는 양상임. 양측의 경제협력은 필요가 많은 산물임. 북한은 외자를 끌어들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제특구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북한 지하자원과 항구를 이용해 낙후된 동북지역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문제는 이런 경협구조가 다소 기형적이라는 점임. 당장 외자 유치에 급한 북한이 중요한 기반시설을 장기임대하거나 지하자원을 헐값에 넘기는 정황이 속속 관측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북중 경협의 급격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남북경협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남북통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옴.
- ◇中 기업들 잇따른 대북 투자계획 = 북중 경협은 장 부위원장의 방중 이후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 중국 대기업인 아타이(亞泰)집단이 나선에 시멘트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달 16일임. 장 부위원장이 아직 중국에 머물고 있을 때임. 바로 다음날에는 대형 국유기업인 루디그룹(綵地集團) 측이 중국 매체를 통해 나선 전력망 등 기초시설 건설을 맡기로 했다고 밝힘.
- 중국 기업들의 대북투자 움직임은 지난 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중·조 무역투자 프로젝트 상담회'에서도 감지됨. 이 무렵 자오통(交通)집단, 중국철로건설집단, 자오상(招商)집단 등도 나선지역에 진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옴.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북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미심쩍어하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최근 그런 우려 분위기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 평가임.

-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각종 개방조치로 호응하고 있음. 북한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중국에 개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중국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린성 투먼(圖們)시 소재 민영기업인 연변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은 지난 1일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함. 북·중은 이번 계약에서 청진항 3·4호 부두를 30년간 공동 관리·이용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중국 측 투자액이 60%가 넘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측이 주도적으로 항만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이미 나진항 1호 사용권을 비롯해 4·5·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의 동해 진출 '숙원'이 풀린 셈임. 중국은 이들 항구를 이용하면 남방지역으로의 물류비용을 줄이면서 한국·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동시에 동북 지역을 개발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함.
- ◇기형적 경험구조...자원 헐값유출 = 북중 경험은 2010년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옴. 중국의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사업, 훈춘(琿春)~나진항 사이의 53km 도로 포장공사, 훈춘의 대규모 '국제 합작 시범구', 신압록강 대교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만 따져 봐도 최소 1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경제협력 중 적잖은 부분이 중국 측이 자금을 대 시설을 마련한 뒤 장기사용권을 갖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각종 시설이 북한땅에 들어서고 투자가 이뤄져도 북한으로서는 상당기간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 중국이 사용권과 건설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나진항 부두의 경우 임대기간이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특혜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북중 경험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지하자원이 싼값으로 중국에 대량 유출되는 현상 역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줄곧 거론됨.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등 광물자원 규모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3.5배 늘어난 8억5천만 달러였음. 특히 t당 평균가격 101달러는 국제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함. '헐값매매'가 의심된다는 것임. 중국은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해산청년광산에 8억6천만 달러를 투자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대규모 광산인 무산광산에 대해서도 50년간의 채굴권을 갖고 있어 북한의 자원 유출 현상은 경험확대와 함께 심화할 것으로 보임.
- ◇남북통합 지렛대 약화 우려 =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확대된 남북교역은 장기적으로 남북통합의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옴. 하지만 급격히 확대되는 북중 경험이 남북 통합, 특히 경제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임.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1999년 3억7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 34억6천



만 달러대로 급증했고 2011년에는 5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함. 이에 따라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 수준에 달함. 반면 남북 경협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으로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북교역액은 2010년 19억1천200만 달러에서 2011년 17억1천400만 달러로 오히려 줄었음. 일부 분야에서는 북중 경협이 남북 경협을 대체하는 현상도 관측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日 국장급 대화 17일 개최 어려울 듯"(9/13,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대화가 일본이 희망하는 17일에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산케이신문은 13일 북한과 일본이 합의한 현안 해결을 위한 국장급 교섭이 '북일 평화선언 서명 10주년'인 오는 17일 이내에 열리기 어렵다고 보도함.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북일 정부 간 교섭이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지연 가능성을 시사함.
-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말 4년 만에 재개한 정부 간 교섭(과장급)에서 '가능한 가까일 시일'에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일본은 양국의 평화선언 10주년 기념일인 17일 교섭을 희망했으나 북한이 난색을 보이고 있음.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은 민주당 대표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교섭을 서둘러 가장 큰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려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협상 주도권을 잃고 북한에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마. 기 타

● 北 "수해지원 받겠다"..대북지원 제의 수용(9/10,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10일 통보해 옴.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수해지원을 받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함. 북측의 입장 통보는 우리 정부가 지난 3일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한지 7일 만에 나온 것임.
- 이에 따라 대북 수해지원을 계기로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금강산관광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후속 대화가 이어질지 주목됨.

● <北, 수해 지원 수용하고도 對南 비난 지속>(9/11, 연합뉴스)

- 북한이 정부의 수해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도 대남 비난을 이어감. 북한 매체는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수해지원 의사를 수용한 다음 날인 11일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등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하는 글을 쏟아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정권 타도는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일당의 악랄한 북남관계 파괴책동, 북침전쟁도발 책동은 절대로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며 "동족대결에 환장해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이명박 역적패당은 우리 겨레의 거족적인 투쟁에 의해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대북정책을 주관하는 통일부를 집요하게 비난함. 이 매체는 '통일부는 왜 자꾸 헛나발을 불어대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김친식 통일부 차관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책임을 '북의 지속적인 도발'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민족 앞에 대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가증스런 궤변"이라고 공격함. '우리민족끼리'는 10일에도 '불안과 위구에 싸인 류우익의 격정 타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극악한 동적대결 정책의 집행자'라고 표현함.
- 특히 북한 매체는 정부가 지난 3일 수해 지원을 제의한 뒤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매일 5건 넘게 내보내고 있음. 이처럼 수해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지 않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이 많고 남한 정부와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됨.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수해 지원 등을 매개로 한 남북 간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남비난을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수해지원 품목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남북 협의와 관련해 판이 깨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를 계속 비난하는 것 같다"며 "남북 간 협의가 시작된 뒤에도 북한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함.

● 북한어선 6~7척 서해 NLL 한때 월선(9/12, 동아일보)

- 북한 어선들이 12일 한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북측 해역으로 되돌아감. 북한어선 6~7척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NLL에서 2마일(3.2km) 가량을 남하해 조업을 벌임.
- 북한 어선이 NLL을 남하하자 우리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 이들 어선에 NLL 침범 사실을 고지하고 북으로 퇴거 조치함. 군 관계자는 "고속정 1척이 출동해 퇴거 조치를 했고 북한 어선은 NLL 북쪽으로 돌아갔다"며 "북한 어선의 남하로 북한군 경비정도 기동했으나 NLL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아 군사적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해군은 북한어선 퇴거 조치 중 연평도 꽃게조업 어선 등 40여 척의 조업을 통제하고 연평도로 귀항토록 함.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운항을 재개함.



◎ <日 핵연료 재처리 지속 파문...핵무장 염두?>(9/15, 연합뉴스)

- 2030년대 '원전 제로'를 선언한 일본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음. 일각에서는 일본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계속함으로써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주재한 '에너지 환경회의'에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확정해 발표함. 이에 의하면 일본은 2030년대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기로 함. 이를 위해 원전 수명 40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원전의 신증설을 하지 않되 수명 40년이 되지 않은 원전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을 확인한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함. 이와 함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지속해 아오모리(靑森)현의 룻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공장 가동을 계속하기로 함.
- 하지만 원전 제로를 추진할 경우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일본 정부는 룻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아오모리현이 룻카쇼무라에 보관돼 있는 약 2천900t의 사용후 핵연료를 원래의 생산처인 각 원전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룻카쇼무라의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정부는 룻카쇼무라가 사용후 핵연료를 전국의 원전으로 반송하면 당장 저장할 장소가 없어 원전의 가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의혹을 제기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로 플루토늄 추출을 지속하는 것은 일본이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임. 규슈대의 요시오카 히토시(吉岡齊) 부학장(과학사)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플루토늄이 계속 쌓인다."면서 "외국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플루토늄의 재고 증가를 의심할 것이다"고 지적함.
- 미국도 일본을 의심하고 있음. 원전 제로를 천명한 일본이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플루토늄 추출을 계속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미국은 일본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원전의 연료라는 전제하에 플루토늄 추출을 용인했지만, 일본이 원전을 가동하지 않겠다면서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할 경우 이란 등에 플루토늄 생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12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을 급거 워싱턴에 보내 상황을 설명했으나 미국의 이해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일본은 지난 6월 원자력기본법을 고쳐 원자력 이용에 '안보 목적'을 추가해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은 이미 원자폭탄 1천~3천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약 3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제로 정책을 제시해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용후



- 핵연료 재처리를 지속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핵보유 의지' 논란을 불렀음.
- 일본의 정치권이 우경화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재무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임. 차기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의 총재 선거(이달 26일) 이후보자들이나 일본의 차세대 지도자로 거명되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과 무장 강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주장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국방당국, 내일부터 이틀간 KIDD 개최(9/11, 연합뉴스)

- 한미 국방부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본회의를 개최함.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음.
-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주요 당국자가 참석해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함.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개설에 합의한 후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임.
- SPI에선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동맹 현안과 미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함. 또 SAWG에선 전략동맹 2015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 핵심군사능력 및 미국 보완 및 지속능력, 한미 C4I(지휘통제체계) 상호 운용성 등을 논의함.
-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과 원칙, 향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함. 이번 KIDD 회의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44차 SCM를 위한 중간단계 협의로서 논의 결과는 SCM을 통해 최종 합의돼 발표될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정부, 지진 피해 中에 50만 불 규모 지원(9/11, 연합뉴스)

- 정부는 지진 피해를 본 중국에 5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힘. 외교부는 현재 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품목을 긴밀히 협의 중임. 중국에서는 지난 7일 운남성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지진으로 81명이 숨지고 820여 명이 다침.



다. 한·일 관계

● 日외무성 전 국장 "일본군 위안부는 국제적 사안"(9/12,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 전 고위 관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안"이라며 일본 내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에 거듭 우려를 표시함.
- 1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조약국장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 소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은 자기 아내나 딸, 누나, 여동생이 강제로 위안소에 끌려가는 것을 상상한다."며 "전쟁 시기의 불가피한 제도라는 일본 측의 설명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그는 "위안부 문제는 고노 담화로 균형을 잡았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숨지기 전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함. 도고 교수는 지난 5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주최한 강연회에서도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재미일본인 또 '도발'..독도 ICJ제소 촉구>(9/12, 연합뉴스)

- 최근 과거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미 일본인들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를 촉구하는 청원을 미국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간) 확인됨.
- 이미 미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미국 내에서 이를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재미 한인들과의 신경전이 예상됨. 이날 백악관 등에 따르면 '히사(Hisa)'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지난 1일 백악관 인터넷 민원사이트 '위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일 영토분쟁을 ICJ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함.
- '한국이 일본의 영토분쟁 관련 제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한국이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으로 시작됨.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 ICJ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절했다"면서 "이는 한·일 양자 간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함. 이 청원은 특히 지난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언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함.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1만2천여 명이 서명한 상태로 백악관이 공식 답변의 최소 요건으로 제시한 '30일 이내 서명인 2만5천명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이와 함께 이 사이트에는 대만, 리앙쿠르암(독도), 남쿠릴 열도, 남서군도, 서사군도 등을 국제법상 지위로 복원시켜 일본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최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앞서 재미 일본인들은 최근 뉴저지주에 건립된 '제2 중군위안부 기



넙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과 미국 의회가 지난 2007년 7월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도 같은 웹사이트에 제출함. 이에 맞서 버지니아한인회 등 재미한인 단체들도 최근 백악관을 상대로 '동해 표기' 청원을 제출한 데 이어 독도 및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망언제조기' 하시모토 이번엔 "야스쿠니 참배" (9/14, 연합뉴스)
 -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하겠다는 의향을 밝힘.
 - 14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하시모토 시장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일본의 역사를 만들어온 분들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함. 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전국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당론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됨.
 - 최근 거의 연일 독도와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망언을 내뱉고 있는 하시모토 시장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시모토는 지난 12일 창당한 일본유신회의 로고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땅으로 그려 넣었으며, 재일 한국인 차별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한 종합 인권박물관인 '오사카인권박물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힘. 일본유신회는 차기 총선 공약인 유신8책(維新八策)에서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3분의 2로 돼 있는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하기로 함. 하시모토는 지난달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놔야 하면 좋겠다."는 망언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샀.

라. 미·중 관계

- 미 하원, '중국 영유권 분쟁' 대책 촉구(9/13, YTN)
 - 중국을 주제로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의원들과 증인들은 "중국이 이른바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이웃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일리애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무역 항로가 있는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에 호전적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은 이 지역 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강조함.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 하원의원도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해 남중국 해역의 평화 안전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능력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함.



마. 미·일 관계

- 미군-자위대 '제1열도선' 긋고 중국 팽창 저지 협력강화(9/11, 한겨레)
 - 지난 9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해변공원을 10만명의 주민이 가득 채움. 주일 미군이 후텐마기지에 신형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MV-22)를 배치하는 데 반대하기 위해 열린 이날 '오키나와 현민 대회'의 참가자 수는 오키나와 본토 인구(122만 명)의 거의 10분에 1에 육박함. 개발 단계부터 많은 사고를 냈던 오스프리가 사흘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택가에 긴급 착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집회 참여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함.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기지에 가장 위험한 수송기를 배치하는 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고야 히토시 기노완 시의회 의원(기지문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렇게 말함. 후텐마 기지는 인구 9만여 명이 사는 기노완시의 시가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 주민들이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해온 그 비행장에 미군은 '과부 제조기'로 불리는 오스프리를 배치하기로 함. 오스프리는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모로코에서, 6월엔 미국 플로리다에서 추락 사고를 내는 등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기종임.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하는 일본시민 1만여 명은 이날 도쿄에서도 국회 의사당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임. 그러나 미국 정부와 주일미군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음. 미군은 지난 7월23일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오스프리 12대를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시험비행을 하기 위해 들여왔음. 이를 오키나와로 옮겨 10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임.
 - 오스프리의 오키나와 배치는 오키나와 미군 재편 계획과 단단히 맞물려 있음. 아직 미국 의회의 반대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해상진출 강화에 맞선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오키나와 미군의 재배치를 일본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음. 지난 4월 합의안에서는 현재 오키나와 주둔중인 1만8000명의 해병대를 1만 명으로 줄이기로 함. 4700명은 괌 기지로 옮기고, 나머지는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기지 등에 순환 주둔시키기로 함.
 - 기지 이전비용의 70%를 대기로 한 일본 정부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기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나, 핵심은 오키나와가 적의 집중타격을 받아 괴멸 위험을 처하지 않도록, 거점을 분산하는 것임. 이른바 '제1열도선'(미국 쪽에서 보면 중국 해양 진출의 방어선, 중국 쪽에서는 2010년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로 목표를 세운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해양 영역의 경계선)의 핵심부에 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미군의 핵심 거점이었던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엔 변화가 없음.
 - 오스프리는 병력 분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핵심장비임. 일본 방위성 간부는 "오스프리는 미 해병대의 행동반경을 크게 넓히고, 기동성



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현재 후텐마 기지에 배치돼있는 CH-46 수송 헬기는 행동반경이 700km에 불과함. 하지만 오스프리는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갑절에 이르는 속도로 무려 3900km를 날아갈 수 있음. 대만(640km)이나 서울(1400km)은 물론이고, 서쪽으로는 중국 내륙, 남쪽으로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남부 지역까지 직진 범위에 들어가게 됨.

- 오키나와 미군 재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음.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주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은 1982년 덩샤오핑의 지시로 마련한 인민해방군 근대화계획에서 2010년까지 제1열도선에 방위선을 펴, 그 인접의 해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중국의 계획은 실행중임. 언젠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일본은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거듭 미국에 다짐받으며, '방어태세 확립'에 머물던 자위대 운용을 '공격 태세'로 전환중임.
- 산케이신문은 미군과 자위대가 남중국해 팔리완섬의 필리핀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를 정비해 함께 훈련에 쓰는 방안을 미-일 양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보도함. 양국은 북마리아나제도 티니안섬 미군기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3일 "미국 국방부가 X밴드로 알려진 탄도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레이더 기지 설치를 일본과 논의하고 있다"며 "일본이 동의하면 몇 달 안에 일본 남부에 기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함.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신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 진출을 크게 우려하는 일본이 '아시아로 귀환한 미국'의 자장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향해서도,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라는 삼국 안보협력의 남은 한 변(한-일 동맹)을마저 잇자고 재촉하고 있음.

● 미차관보 냉정한대응 호소, 일중 양국에 "도발 피해 대화" (9/12, 산케이신문)

- 캠벨 미 국무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는 11일, 워싱턴의 강연에서, 일본 정부에 의한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의 국유화로 인해 일중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미국에 있어서도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해 일중 양국에 재차 냉정하게 사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함.
- 캠벨씨는, 유럽 채무 위기에 수반하는 경제 위기나, 미국이 여전히 경기 회복 상태에 있는 것을 지적함. 그는 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조종실"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의 견인차로서 일본과 중국 간의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더불어, 특히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평화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나라가 도발적인 행동을 피해 대화를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그는 또한 일중 양국이 긴장완화를 향한 협의를 조기에 시작하도록 재촉함.

바. 미·러 관계

● 푸틴 "롬니의 태도는 '러시아가 옳다는 반증'" (9/13, The Moscow Times)

- 미 대통령 후보자인 롬니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유럽 안티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모스크바의 반대가 정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함. 그는 또한 롬니의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고도 언급함.
- 롬니가 우리를 제일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마이너스이다. 그러나 그런 점을 직접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점은 그가 솔직하고 숨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푸틴이 말함.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그는 소치의 흑해리조트에서 리포터에게 말함. 롬니는 한때 러시아를 가리켜 "의심의 여지없는 지정학적 적국"이라고 표현했으며 만약 그가 11월 6일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를 누른다면 러시아를 향해 "비유연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음.
- 지난주, 푸틴은 롬니의 비판은 대부분 선거용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유럽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심은 깊어질 것임. 워싱턴이 이미 유럽에 배치를 시작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워싱턴은 방어는 이란으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에게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는 이 시스템의 요격미사일은 러시아의 비행기에 장착된 탄두를 2018년쯤 파괴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핵미사일의 약화와 함께 힘의 균형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모스크바는 이 시스템이 러시아를 향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개런티를 원하고 있음. 이 아이디어 대해서 푸틴은 "롬니에게 고맙다 왜냐하면 적국으로서 러시아를 묘사한 것은 미사일방어가 러시아 견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의심을 확신시켜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그는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 우리에게 좋은 협상위치를 내어준셈" 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 당국자들은 오바마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은 방어체제가 러시아 세력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의 의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롬니가 이번 선거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4년간 그 또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진 누군가가 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푸틴이 말함.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 인지에 대해 고민할 때 이런 사항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



고 덧붙임.

사. 중·일 관계

- **中, 댜오위다오에 해양감시선 2척 급파… 주권 선포(9/11, 인민일보)**
 -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10일 외교부로 나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댜오위다오 '구매'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력히 항의함.
 - 양제츠 부장은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는 옛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법적 근거는 명백하다며, 중국 측은 일본 측이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에 대해 취하는 이른 바 '구매'라는 일방적인 행위는 분명 불법이자 무효한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일본이 중국 영토를 수탈했던 역사적 사실을 한 치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조금도 흔들 수 없다고 거듭 밝힘. 양 부장은 또한 중국 정부와 국민은 국가 영토주권이 침범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에 대한 주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말함. 아울러 중국 측은 일본 측에 '도서 구매'라는 그릇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중국 영토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길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일본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당일,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 또한 일본 외무성 대표에게 엄정한 교섭 제기는 물론 항의 각서를 전달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 남샤오다오(南小島), 베이샤오다오(北小島) 등의 3개 도서 '구매'를 결정하는 '국유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中, 댜오위다오에 해양감시선 2척 급파… 주권 선포(9/12, 인민일보)**
 -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감(海監, 해양감시선) 46호와 49호가 댜오위다오(釣魚島)로 향했다고 함. 이전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중국은 줄곧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댜오위다오 12해리 영해지역에 중국의 해감이 거의 진입한 적이 없었음. 그러나 상기 조치로 중국은 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댜오위다오와 인근 도서에 대한 중국의 불변적 주권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임.
 - 신화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해감 46호와 49호는 11일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도착했고, 해감부문은 관련 실행방안을 마련한바 상황에 따른 주권 수호 행동을 벌여 주권을 선포할 것이라고 전함.
- **중국, 교류 정지 확대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국영 TV(9/12, 산케이신문)**
 - 중국 당국은 일본 정부에 의한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 국유화에의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어 향후, 일중국교 정상화 40주년



을 기념한 교류 사업 등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제시됨. 중국 국영의 중앙 TV는 연일, 센카쿠 문제를 둘러싸고 대일 비판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 각지에서 반일 데모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 한 11일에는, 중국 정부 내의 하부조직인 중국외무성의 수장이 단장을 맡는 방일단이 서둘러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이 공식화되었음.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 정부와 인민은 주권과 영토의 문제로 절대로 반보도 양보하지 않는다." 고 언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중국 측 방문단의 방일 취소가 향후, 잇따를 가능성이 있음. 일중 관계의 악화로 인해, 일본에의 단체여행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되고 있음.

● 중국 "양국 간 갈등고조가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 (9/13, 로이터통신)

- 일본이 화요일 영토분쟁이 일어나는 동중국해의 섬을 "매입"했다고 발표하자 베이징은 영토주권침해라며 경고를 하였음. 이는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일본의 섬 매입은 중일간의 무역에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뉴스브리핑에서 상무부 부부장인 지양저웨이(지양저웨이)가 언급했음.
-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 임. 2011년에는 양국 간의 양자무역의 양은 14.3%성장하며 345조 달러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음.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정부는 일본상품에 대한 보이콧이 잘못된 점이 없다고 지적하였음. 중국은 일본의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가장 큰 시장임. 중국의 일간공영기업일보는 여행사들이 일본으로 가는 여행이 취소되었다고 보고해 왔다고 전함. 그는 "나는 아직 일본의 중국영토주권 침해로 인해 중국소비자들이 어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소비자의 입장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는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임.
- 도쿄와 이야기한바, 일본의 외무성장관인 고이치로 겐바씨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양측이 보다 큰 그림을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일본과 중국 양국이 큰 그림을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중일관계가 이런 사안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중국에게 침착하고 적절한 순치를 밟아 나가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통신원에게 말함. نيسان 자동차의 간부가 지난주 양국 간의 긴장이 중국자동차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함.
- 이 분쟁은 지난 달 일본이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다이유)섬에 입항하려던 중국운동가들을 구류한데서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음. 중국의 외무성은 목요일 일본의 섬매입에 대해 비난을 하였음. "중국의 모든 인민들은 일본의 행동에 의분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은 단호할 조치를 취할 것이



다."라고 홍레이 대변인이 리포터에게 말함.

● **中 反日시위 역대 최대...日 기업 방화·약탈(9/16,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15일 중국 50여개 도시에서 있었던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항의하는 반일 시위에 최대 8만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함.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불타거나 약탈당함. 이번 반일 시위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40년래 최대 규모임.
- NHK방송은 16일 중국 55개 도시에서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15일 있었으며, 일부 시위대가 일본계 기업의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일본계 유통업체의 상품을 약탈해 큰 피해가 났다고 보도함. 일본 언론은 베이징의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2만 명 이상이 시위를 벌이는 등 중국 전역에서 최대 8만 명이 참여했다고 전함. 이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반일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임.
- 산둥(山東)의 칭다오(靑島)에서는 15일 오후 파나소닉그룹의 전자부품 공장 등 10개 일본 기업 공장에 시위대가 난입해 불을 지르고 생산라인을 파괴함. 도요타자동차도 칭다오 판매 1호점이 방화 피해를 봤으며, 다른 지역 판매점에서도 피해가 발생함. 칭다오의 일부 시위대는 유통업체인 '자스코 이오지마'를 습격해 엘리베이터를 파괴하고, 창고에 보관돼 있던 상품 24억 엔(약 340억 원)어치 가운데 절반 정도를 약탈하거나 파손함.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서는 3천명의 시위대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일본계 슈퍼마켓 '헤이와도(平和堂)'를 습격해 점포 1층과 2층의 유리창을 부수고 상품을 훼손함. 광둥(廣東)과 쑤저우(蘇州)에서도 일본계 음식점과 백화점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음.
- 일본 정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기업의 안전이 위협받자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일본인과 기업의 안전 확보를 요구함. 시위대가 폭도화하자 일부 일본계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어 간판을 내리고 중국 국기를 내걸기도 했으며, 중국인 종업원을 동원해 시위대를 설득하기도 함. 일본대사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 혼자서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일본어 대화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할 것 등을 지시함.
- 일본 정부와 언론은 16일에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최소 30개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함.

아. 중·러 관계

● **[동북3성 - 러시아 극동 가다] 중국, 유럽행 실크루트 시베리아도 점령 중 (9/12, 중앙일보)**

- 세계 각국이 북극 항로 개척에 군침을 흘리는 가운데 보다 훨씬 짧은 '시베리아 종단 루트'가 중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음. 중국 동북3성 북단~아



무르강~시베리아 중부 내륙~레나강~북극해로 이어지는 남북 종단 물류 신루트임.

- 신루트는 지구온난화로 열린 북극 항로보다 훨씬 짧아 완성되면 동북아 물류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됨. 떠오르는 북극해 항로는 부산~유럽을 기준으로 기존 노선을 약 40%나 단축함. 그런데 종단 신루트는 이를 혁신적으로 단축시킴. 시베리아 종단 신루트는 동방정책을 추진 중인 러시아와 동북3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 한데 중국이 더 적극적임. 두 나라는 이미 접경지역에 4대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했음. 이는 양국이 2009년 체결한 '2009~2018년 극동·시베리아와 동북3성의 연계 발전 계획'의 실천임.
- 4대 클러스터는 서쪽으로부터 ①자바이칼-만저우리 ②블라고베센스크-헤이허 ③니즈니 레닌스크에-툰장 ④블라디보스토크-훈춘 등이다. 이들 클러스터는 현대화된 통관 설비와 신설된 도로·철도 등을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를 중국 동북3성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음. 중국은 공업단지도 적극 조성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50만㎡의 '중국경제무역합작구'에는 중국 상무부가 20억 위안(약 3500억원)을 투자함.
- 중국은 '시베리아 물류 혁명'의 최대 수혜자임. 러시아의 유력 신문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바이헤르 콘스탄틴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장은 "중국이 시베리아를 동-서-북으로 연결하는 물류망을 통해 시베리아의 자원 및 경제를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함.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국의 이 지역 진출은 한마디로 지지부진함.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러시아 외교관들로부터 '한국이 대중국 투자의 10%만 극동·시베리아에 투자해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들은 '한국의 시베리아 진출 기회가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임.

자. 일·러 관계

● 푸틴 대통령, 북방 영토 문제 해결에 의욕(9/10, 요미우리신문)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9일, 러시아에서 폐막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APEC) 정상회의의 총괄 기자회견에서 대일 관계에 대해 "과거부터 항상 따라다니는 일본과의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말해 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에 의욕을 내비침.
- 대통령은 또, 8일의 일러 정상회담에 합의, 12월을 목표로 하는 수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조용한 환경에서 문제를 상세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함. 하지만 러시아는 하보마이, 시코탄의 2섬을 일본에 인도할 방침을 확실히 하지 않았음.



차. 기 타

● 美, 구한말 일본 독도영유권 명기 안 해(9/12, 연합뉴스)

-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용인하고 나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 11일 (현지시간) 재미 사학자 유광언 씨가 연합뉴스에 제보한 미국 해군 수로국의 1909년도 아시아 항해(Asiatic Pilot) 안내서를 보면 구한말 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여기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음.
-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문서인 해군 수로국 안내서는 5장에서 '한국의 동해안'이란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데 묶어 지형과 수심 등 지리적 특성을 소개함. 미국 해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지만 대마도는 "일본에 속한다(belong to Japan)"라는 표현으로 일본 영토임을 명기함.
- 미국 해군이 이 안내서를 발간한 1909년은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하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에게 한국 지배를 인정받은 지 4년이 흐른 시점임. 안내서에는 특히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상태여서 입국 때 일본 측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적혀 있어 미국 정부가 당시 한국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음.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추론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식으로 중립 또는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해왔음.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유 씨는 "독도가 유사 이래 한국 땅인데도 일본으로부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미국 해군의 간행물을 발견했다"며 "미국은 자국 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함.

● 리덩후이 前대만총통 "다오위다오는 일본 영토"(9/13, 연합뉴스)

- 리덩후이(李登輝·89) 전 대만 총통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해 대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리 전 총통은 일본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 최근호에 소개된 대담에서 "다오위다오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본의 영토"라고 말했고 중국시보 등이 13일 보도함. 그는 "다오위다오가 대만 영토라고 하면 대만인이 좋아하겠지만 총통 시절부터 일본 영토라는 명확한 입장을 피력해 왔으며 이는 역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임.
- 그는 "다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선 주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어업 문제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대만과 일본이 가능한 한 빨리 어업협정을 매듭지어서 대만 어민이 다오위다오 근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리 전 총통은 일본의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해서



는 "남의 집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임.

- 총통부는 "다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도 대만의 영토이며 일본의 국유화 행위는 어민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의 집 일이 아니다" 라고 반박함. 리 전 총통은 지난해 6월 재임기간 국가 안보와 외교 등에 사용되는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마잉주(馬英九) 총통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등 마 총통과 불편한 관계를 보여 왔음.

● 中 "이슬람 비하·외교시설 공격 반대"(9/16,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6일 "중국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비방은 물론 외교시설 공격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함.
- 홍 대변인은 이날 부처 웹사이트에 이런 견해를 밝힘.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의 미국 영화로 이슬람권에서 반미 시위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리비아 소재 미국 영사관이 무장 세력에게 공격당한 가운데 나온.
- 그는 "중국은 서로 다른 문명과 종교 간에 존중과 평등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소통을 끊임없이 주창해왔다"며 "중국은 이슬람을 비방하고 무슬림의 감정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힘. 그는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이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정에 따라 외교관의 생명과 외교시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